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조 원 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153만 대전시민이 내일의 삶을
희망으로 가꾸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조원회 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장과의 일괄질문·답변을 1문 1답 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조원회 의원

오늘 방청석에 지역에서 오신 북대전발전위원회 배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영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봉구 거주외국인복지관 관장님과 거주외국인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를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조성 당시 최고의 기업환경과 주거환경을 갖춘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큰 기대를 품고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의 거창했던 그림은 더는 찾아볼 수 없고 점점 지역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덕테크노밸리 내 중심에 위치해 있는 관광휴양시설용지에 관해서입니다.

〈 대덕테크노밸리 내 관광휴양시설용지 현황 〉



현재 용산동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지난 2005년 (주)흥덕산업이 부지를 매입하였다가 2014년 11월 (주)현대백화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이 관광휴양시설용지를 대규모 아울렛으로 개발하려다가 미래부와 대전시로부터 입점시설 대부분이 판매 시설인 경우는 관광휴양시설용지의 지정목적 및 개발방향과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현재는 담보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시는 올 8월 현대아울렛 입점에 따른 지정목적과 개발방향에 관하여 미래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대전시의 질의내용과 미래부의 회신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택 시장

조원휘 의원님께서서는 용산동 현대아울렛 등 7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거주외국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올 8월 현대아울렛 입점에 따른 관광휴양시설용지 지정목적과 개발방향에 관해서 미래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질의내용과 회신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현대아울렛 입점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판단을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관광휴양시설용지의 개발방향과 지정목적은 반영하지 않고 지정용도에만 적합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아니면 판매시설이 대부분인 경우 미래부장관의 특구개발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지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부에서는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에는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등 지정용도의 시설은 모두 입주가능하나 용지 대부분이 판매시설인 경우에는 관광시설용지의 지정목적과 개발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래부장관의 특구개발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조원휘 의원

대전시는 미래부에 질의하기 전인 올 4월에 현대아울렛 입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공람공고를 내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때 지역주민들은 현대아울렛 입점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현대아울렛 입점을 찬성하고, 적극 유치해야 한다면서 1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은 현대라는 굴지의 대기업 유치에 기대감과 희망에 부풀어 서명서까지 제출하였지만 대전시는 지역상권 위축과 미래부의 회신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대 측의 사업을 반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이 화가 난 것은 현대아울렛 입점이 무산된 것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람 공고까지 실시하고 1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서명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주민들에게 사업이 반려된 것에 대한 설명회는커녕 이렇다할 단 한 마디의 해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마디의 해명도 없이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돌아서 버린 대전시에 지역주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로 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사업추진 결과와 반려 이유 등에 대해 설명은 해야 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한 행정 입니까? 시장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지역주민들께 현대아울렛 입점 무산과정과 그 과정에서 유치서명까지 펼친 주민들의 의향이 무시된 채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점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실 지역주민들은 10년간 방치되어 있는 땅에 현대 아울렛이 들어와 침체되어 있는 대덕테크노밸리지역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현대아울렛 입점이 무산 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10년간 기다려 온 기대감이 또다시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 권선택 시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아울렛 입점 무산과정과 그 과정에서 유치서명까지 펼친 주민들의 의향이 무시된 채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대아울렛 입점의 판매시설 건축용도 변경은 관련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따라 제안접수, 주민 의견 청취, 관계부서의 협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안접수 이후 지구단위계획 입안 전에 폭넓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관광휴양시설용지의 개발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월 12일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자체점검 실시계획을 언론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공람기간 동안 제출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입안할 경우에 반영여부를 통보할 예정임을 지난 6월에 우편으로 개별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방향과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8월 2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제안자에게 사업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서 수요자 중심의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이 지역을 미개발지역으로 방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참고하고 제반규정과 원칙을 감안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조원휘 의원

시장님, 우리 북대전지역은 현재 심각한 지역 쇠퇴기에 빠져 있습니다.

인근 세종시의 경우는 백화점, 쇼핑센터, 종합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속속들이 들어서면서 생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고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종시 발전으로 가장 위축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대덕테크노밸리지역인 북대전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은 지 10년도 안 된 아파트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가 하면 인근의 상권은 다 죽어가고 있으며 조성 당시 800만 원 이상을 주고 분양받은 근린생활용지에는 콩과 깻잎 등 농작물만이 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당시 입주민들에게 제시한 청사진은 단지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각한 것은 대덕테크노밸리 중심에 있는 금싸라기 땅들이 투기꾼들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기업들이 대덕테크노밸리 입주 당시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개발하지 않고 있다가 일부는 공장을 짓지 않고 건설 브로커들과 손잡고 분할 매각하여 빠져나가 버리고 그곳에는 500 ~ 1,000평의 소규모 금속가공업체들이 입주하여 소음, 분진,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고 있어 대덕테크노밸리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거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북대전 주민들은 인근 세종시로 쇼핑을 가고 병원을 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입주해 있던 기업들도 하나둘씩 세종시로 이탈하고 있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권선택 시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호텔이나 문화시설 등 관광시설용지 지정목적에 맞는 개발이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차선택을 세워서라도 하루속히 관광시설용지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대덕테크노밸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특구개발사업으로 그 개발방향 및 지정목적, 단지의 성격과 개발환경, 입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인 현대백화점에서 대덕테크노밸리 지정목적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적합한 요건을 갖춰 제안해 오신다면 주민, 개발자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원회 의원

지역주민들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가 담보상태에 있는 관광휴양시설용지를 하루속히 개발하여 인근의 상권이 다시 회복되고 기업들의 입주가 활기를 찾아 새롭게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현대아울렛 입점이 미래부의 질의 결과 지정용도와 맞지 않고 타 지역 상권위축과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아울렛 입점은 불가하다며 반려시켜 버렸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방치해 놓은 이 땅을 기약도 없이 또다시 미개발지로 그냥 방치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까?

잠시 지역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겠습니다.

(10시 14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16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시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신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지역을 침체시키고 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침체기에 빠진 대덕테크노밸리지역에 대전시가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야 할 판에 오히려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용산동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주)현대백화점의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특정 용도에 맞게 강제하여 개발을 유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북대전지역 주민들도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는 방치된 채 지역을 침체시키고 있는 관광휴양시설용지를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호텔이나 문화시설 등 관광시설용지 지정목적에 맞는 개발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차선책을 세워서라도 하루속히 관광시설용지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의 미개발용지에 대한 대전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현대 측의 사업방향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며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택 시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해당지역의 미개발용지에 대한 대전시의 계획과 앞으로 현대백화점 측의 사업방향에 대한 예상과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상업, 유통, 주거, 휴양 등이 복합된 산업단지로서 특히 단지 중앙에 위치한 관광휴양시설 용지는 기업활동 지원은 물론, 단지 내 종사자와 가족,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가, 휴양활동까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지정목적과 개발 방향 지침, 주민정서를 모두 고려한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앞으로 관광휴양시설용지의 지정목적과 개발방향 등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덕테크노밸리가 중요한 지역임을 감안해서 이 지역이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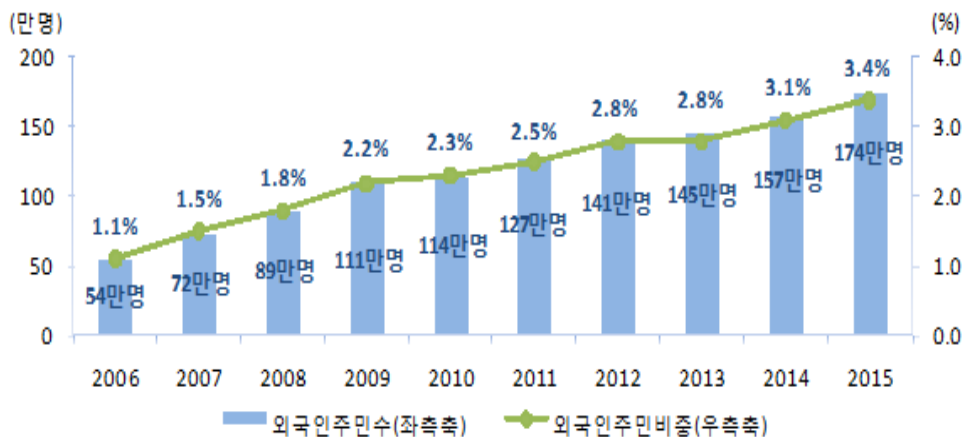
◎ 조원휘 의원

다음으로 거주외국인 지원부서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모두 174만 명이 넘어섰으며 이를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열한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로 충북 158만, 대전 153만, 광주 148만 인구수보다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외국인 주민 수는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4.4%가 증가하여 주민등록인구 증가율 0.6%의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주민수 증가(비중) 추이 〉



〈 연도별 외국인주민 증가율 〉

(단위 : 천명)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국인 주민수	537	723	891	1,107	1,139	1,265	1,410	1,446	1,569	1,742
증가인원	-	186	169	216	32	126	145	36	124	172
증가율(%)	-	34.7	23.3	24.2	2.9	11.0	11.4	2.6	8.6	11.0

지역별로는 경기도, 서울, 경남 순으로 수도권에 전체 외국인주민의 63.3%가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만 5,190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 1,741,919명 (100%)

경기 554,160명 (31.8%)

서울 457,806명 (26.3%)

인천 91,525명 (5.3%)

대전 25,190명 (1.4%)

세종 4,302명 (0.2%)

충북 48,002명 (2.8%)

충남 83,524명 (4.8%)

광주 26,536명 (1.5%)

전북 43,141명 (2.5%)

전남 48,473명 (2.8%)



강원 26,657명 (1.5%)

대구 37,610명 (2.2%)

경북 70,725명 (4.1%)

부산 57,807명 (3.3%)

울산 38,183명 (2.2%)

경남 108,375명 (6.2%)

제주 19,903명 (1.1%)

우리 시의 경우 2만 5천여 명의 거주외국인에 대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외국인지원업무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해외유학생 유치관리 및 유학생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 소년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보건정책과에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 인천, 제주를 제외한 14개의 시·도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통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외국인 정책의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경우 거주외국인에 대한 업무가 기획조정실과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거주외국인에 대한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방비만을 투입하여 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주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 · 광역시 외국인 · 다문화정책 관련 조례 및 담당부서 비교 〉

지자체	조례(거주외국인)	조례(다문화)	담당부서 (외국인)	담당부서 (다문화)
서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부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여성가족과	
대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여성가족정책관	
인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자치행정과	여성정책과
대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국제교육담당관	여성가족청소년과
광주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사회복지과	
울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종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여성가족과	
경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다문화가족과	
강원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여성청소년가족과	
충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여성정책관	
충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여성가족정책관	
전북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국제협력과	
전남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여성가족정책관	
경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여성가족정책관	
경남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여성가족정책관	
제주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자치행정과	양성평등정책과

◇ 권선택 시장

다섯 번째로 2012년 7월 거주외국인 지원부서 통합추진 시도 후 3년이 지났음에도 통합을 추진 못하는 원인과 통합을 위해 그동안 실·국 간 조정내용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정책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외국인 전담 조직 설치를 위해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여성국 등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 발생으로 2012년 7월 1일 자로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다문화가족담당을 우선 신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외국인 지원업무를,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이원적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통합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정책 수혜대상,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원회 의원

매년 거주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의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여건 개선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 부서를 포함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택 시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거주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거주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급격한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매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외국인시정참여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벨트 조성에 따른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면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외국인 임대아파트 공급, 과학 박물관 조성 등 관련 사항을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운영의 통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글로벌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조원휘 의원

다음은 거주외국인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217개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은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나 재정지원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다문화가족을 제외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재정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 광주, 경남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거주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주외국인 복지센터 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을 설립 운영하여 종합적 지원을 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의 경우 다문화가족은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족담당에서 5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중이나 다문화가족 이외에 외국인노동자나 유학생 등 기타 외국인들은 다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거주외국인의 종합적 지원업무를 운영할 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나 국제교류센터가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정체성이 모호하고 업무의 비효율성과 빈약한 예산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 등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2014년 국비 16억, 시비 16억을 확보하여 이주외국인복지센터를 준공해 민간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매년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1억 원을 책정해 이주외국인 교육, 상담, 의료, 문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거주외국인의 증가와 국제화 사회로의 진입 등 시대적 변화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거주외국인 지원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이주외국인복지센터 또는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건립 방안과 거주외국인을 위한 민간단체에 지원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올 한 해도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에 누수는 없는지 또한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행정의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권선택 시장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급격한 거주외국인의 증가와 국제화사회로의 진입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주외국인복지센터 또는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등의 건립방안과 거주외국인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5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국제교류 센터에서 거주외국인의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외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유성구 평생학습문화센터 내에 다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 바 있으며, 매년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이 종전 다문화 가족에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립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